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eas.or.kr) / 주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발행인 신현석 / 편집인 주영호, 정수현, 장아름, 홍세영, 김혜연, 안지윤 / TEL 010-6444-0805 / E-mail keas1967@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고등교육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단상(斷想)

유 현 속 | 한국교육개발원

오랫동안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 정책 개발을 수행하면서 갖게 된 의문점 중의 하나는 ‘왜 이론대로 정책을 개발하여도 정책을 적용한 결과는 기대한 바와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대체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 먼저 주제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리뷰한 다음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내용을 설정하고, 적절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론대로라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교육 문제들은 수 없이 연구를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 모호한 문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교육 부문의 연구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수 십년동안 연구에 오고 있는 ‘대학입시 문제’는 아직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 교육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도 연구문제의 명료성에 비하면 정책집행의 성과가 기대한 바와 같지 않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고등교육 연구·개발에 있어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간의 고등교육 연구·개발 경험을 통한 몇 가지 단상을 제시한다.

정책 내용 만큼이나 정책 환경의 고려가 중요하다. 필자가 그간 수행한 고등교육 연구들은 그 결과가 정책에 직접 반영된 경우도 있고, 일부 연구들은 그저 연구로서 존재할 뿐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이 수립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했음도 고백한다. 다양한 주제의 고등교육 연구·개발 과정에서 얻게된 생각 중의 하나는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책 환경에 의해 성과도 좌우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고등교육 정책을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고등교육 연구에서 요구되는 일종의 '센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고등교육 정책을 생명체와 같이 생각한다면, 생명체의 존립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형성과 토양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한다면 고등교육 정책이 어떠한 전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라날 것인가를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되

고 집행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고등교육정책이라 할지라도, 정치·경제·사회적 토양이 우리와 다른 정책을 벤치마킹 할 경우에는 이를 우리의 토양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등정책은 다른 교육단계 및 타 부문의 정책과 교류하면서 생존한다는 점을 중시해야한다. 경제, 사회, 문화 정책과의 연계검토는 필수이며, 상·하로는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과의 연계, 횡으로는 시민교육, 국제화 교육 등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대졸자 취업 관련 정책은 산업 및 고용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화 정책, 산업육성 정책, 국제화 정책 등과의 유기적 연계검토를 통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의 피로도와 수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피로하게 되면 인체와 유사하게 그 효과가 감소되어 간다. 예컨대, 고교평준화 정책은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한 중요한 정책이었으나, 도입 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정책의 피로도 역시 증가한 상황이다. 고등교육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의 상정과 정책의 피로도가 증가한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정책의 타겟인 대학과의 ‘협의’, ‘협상’ 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문제들은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론의 형성은 물론이고,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중재하는 일이다. 정책 성과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러한 전략을 통한 정책 집행은 어느 단계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정책이 기대한 바와 같은 성과를 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경우 정책의 정당성도 불구하고, 실천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성과가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해당사자인 대학과의 충분한 협상과 협의가 미흡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업의 내용과 추진전략이 결정되고 대학의 대상으로 설명회를 전개하는 방식으로는 협상 중심의 정책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등교육 개혁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도 확대되어 왔다. 이 시기는 국제기구 등에서 국가별 대학경쟁력 순위가 발표되는 등 국제적 맥락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강조되기 시작하던 시점이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학이 충분한 협상을 통하여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 구조조정 및 대학평가에서도 ‘협상’의 개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책의 개발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책을 실천하는 것은 대학이다. 그리고 대학은 자신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수행역량을 고려할 수 있는 ‘협상’이 밀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버지니아 주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버지니아 주 정부는 2004년부터 주내 고등교육 구조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상’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한 구조개혁 전략을 추진하였다. 대학마다 각기 다른 수행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주 정부는 주 구조개혁법안 (the Restructured Higher Educatio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operation Act of 2005)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의 핵심은 주의 대학들이 주 정부가 제시한 11개의 성과목표치 (performance benchmarks)를 달성하는 대가로 등록금 책정을 비롯한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3단계로 이루어지는 구조개혁은 1단계에서는 구조개혁에 참여하는 전제조

건으로서 대학발전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2단계에서는 주지사와 대학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경영협약을 맺게 되는데, 양해 각서(Memoranda of understanding)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대학들은 주 정부에게 더 많은 재정적 행정적 권한을 요구하는 대신, 주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 또는 수행기준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행평가에서 최고단계를 받은 대학들은 협약대학 (Covered University)의 지위를 얻게 된다.

‘협상’과 ‘협약’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정부의 정책요구와 대학의 요구가 점점을 이루어 정책집행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정책목표에 부합한 성과 평가와 피이드백이 중요하다. 고등교육 정책의 이론과 실제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정책이 의도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평가와 평가에 따른 피이드백을 실효성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과 실제사이의 간극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들은 우선 목표에 있어서 명료성을 확보해야 함을 물론, 성과평가가 설정한 목표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책 성과평가가 목표와 관련이 적은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업들과 중복된 정책목표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취업률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성과 목표의 하나다. 그러나 취업률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목표는 아니다. 또한 다 초점 정책 목표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두뇌한국 21사업은 당초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평가 항목에 학부조직 개편 등을 추가함으로써 초점이 확대된 사업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피이드백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교육에 관한 수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만큼 정책의 평가와 피이드백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선 정책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비 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예산 규모는 극히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개인차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들은 공공정책 프로그램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을 통해 수행될 필요가 있고, 국가 재정지원의 효율성 검토차원에서 평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공공정책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이중차감 평가방식’도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근거한 고등교육 정책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담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이론과 실제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어야 한다.

우선 고등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블랙박스로 간주되어 왔다. 대학교육 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정작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교육의 현장 즉, 수업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대학교육의 성과 평가를 위한 국제적 동향은 투입위주의 평가에서 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고려한 평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교육의 성

과 평가는 투입요인과 취업률 등 소수의 산출요인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대학교육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교육의 '과정'에대한 데이터의 확보가 시급하다.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교수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분석이 필요하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고등교육 관련 종단데이터 또는 시계열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이 요망된다. 그간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는 단 년도 데이터나 의견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와 종단데이터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근래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비교적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수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성과평가도 시계열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중 장기적 맥락 속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단데이터는 경제, 사회분야에서 구축된 종단 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됨으로써, 후속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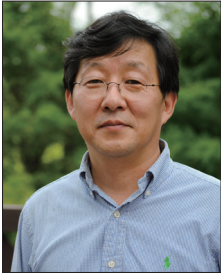
고등교육 관련 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대학교육에 관한 전국규모의 조사, 종단데이터의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고등교육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미래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한 고등교육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정치·경제·사회 등 타 부문은 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인력을 활용하는 입장인 반면, 교육은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부문에서의 미래 전망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식생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현상과 교육방식의 변화는 고등교육 체제에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미래사회 변화 요인이다.

대학은 그동안 지식생산의 주체가 되어왔다. 앞으로 지식생산의 주체는 기업도 될 수 있고, 연구기관도 될 수 있으며, 공공 기관도 될 수 있다. 즉, 대학의 지식생산 기능이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기관들이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나선형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에 대학의 입장만을 고려한 고립된 정책개발은 덜 중요해 질 것이다. 지식생산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내를 벗어나 국외 기관들과도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고등교육 서비스 공급체제하에서 대학교육 성과는 더 이상 국내시장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기준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방식의 변화는 고등교육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교육서비스를 받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노벨상 수준의 명품 강의도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선도적으로 MOOC를 모든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미국 MIT 대학이 Electronics Circuit 강좌를 제공하자, 162개국에서 155,000명이 이에 등록하였고, 힘든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7천 여명이 성공적으로 과정을 이수하였는데, 이 강좌에 등록한 15만이라는 학생수는 지금까지 MIT가 배출한 동문보다 많은 수라고 한다.

지식생산 체제의 공유, 교육방식의 변화는 앞으로 고등교육 제도와 운영방식, 인프라 구축 은 물론, 고등교육 정책 성과평가 방식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 논단 |

대학에서의 교육행정학 교육의 발전 방향¹

반 상 진 | 전북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지난 1967년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한국에 교육행정학의 학문공동체가 구성되었고, 1995년부터는 지금의 한국교육행정학회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학문공동체의 틀을 갖춘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교육행정학이 우리 교육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교육행정학의 연구활동은 학술지, 저서,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그 어느 교육학 영역보다도 활발하였고, 그 여파가 학교현장은 물론 국가 교육정책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육행정학의 왕성한 연구 활동과 실천 활동에 비해 교육행정학 교육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기대 이하인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2015년 현재 198개 4년제 대학 중에서 49개 교육학과 학부수준(전체의 24.7%)에서 교육행정학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문분야로서 교육행정학의 영향력이 확대되느냐 여부는 교육행정학 교육의 활성화가 기본 전제이다. 연구와 교육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다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내연과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학 교육의 영향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학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 교육행정학이 지향하는 진정한 인재상, 교육행정학에게 요구되는 역할 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이 좀더 정밀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 교육행정학 교육이 대학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활동의 특징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진단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학부수준에서의 교육행정학 교육 현황

교육행정학 교육의 현 위치는 학부수준에서 교육행정학 개설 현황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4년제 일반대학 총 198개 대학 중에서 교육학과가 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일반대학 39개교(국·공립 13개교, 사립 26개교)와 교육대학 5개교로 총 44개가 있고 전체 4년제 대학의 22.2% 수준이다.

¹ 이 글은 반상진(2015)의 “학부 과정에서의 교육행정학 교육에 대한 분석과 발전과제, 『교육행정학연구』, (제32권 제2호)”에서 수정·요약하였습니다.

그리고 44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학과를 대상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표 1〉), 기타 분야(21.3%)를 제외하고 교육심리 영역 교과목이 196개로서 전체의 12.4%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교육행정 영역 교과목이 183개로서 전체의 11.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생교육 영역 교과목이 10.6%, 교육사·철학 영역(10.5%), 교육공학 영역(10.1%), 교육사회학 영역(8.8%), 교육평가 및 측정 영역(5.7%), 교육상담 영역(5.4%), 교육과정 영역(3.7%) 순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교육학 하위 전공별 학문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학과 전체에서 어느 전공 영역을 비중 있게 개설하고 있는지 그 정도의 수준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행정학 영역은 교육심리 영역 다음으로 많은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학 교육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기타 분야(17.5%)를 제외하고 교육심리 영역 교과목이 74개로서 전체의 12.8%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평생교육 영역 교과목이 69개로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사·철학 영역 교과목이 11.4%, 교육행정 영역(10.6%), 교육공학 영역(10.1%), 교육사회학 영역(9.0%), 교육상담 영역(6.2%), 교육평가 및 측정 영역(6.1%), 교육과정 영역(4.3%) 순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대학 교육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기타 분야(23.5%)를 제외하고 교육심리 영역 교과목이 122개로서 전체의 12.1%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교육행정 영역 교과목이 120개로서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공학 영역 교과목이 10.1%, 평생교육 영역(10.0%), 교육사·철학 영역(9.9%), 교육사회학 영역(8.7%), 교육측정 및 평가 영역(5.5%), 교육상담 영역(5.0%), 교육과정 영역(3.3%) 순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설립별로 개설된 교육학 교과 영역 비중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관계없이 교육심리 영역이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교육행정 영역은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 교육학과에 더 높은 비중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교육학과 개설 교과목 현황

(단위: 개, %)

구분	학교수	개설 교과목 현황										
		교육 심리	교육 행정	평생 교육	교육사 철학	교육 공학	교육 사회	교육 측정 및 평가	교육 상담	교육 과정	기타	계
국·공립	24 (48.9)	74 (12.8)	61 (10.6)	69 (12.0)	66 (11.4)	58 (10.1)	52 (9.0)	35 (6.1)	36 (6.2)	25 (4.3)	101 (17.5)	577 (100.0)
사립	25 (51.1)	122 (12.1)	120 (11.9)	101 (10.0)	100 (9.9)	102 (10.1)	88 (8.7)	55 (5.5)	50 (5.0)	33 (3.3)	237 (23.5)	1008 (100.0)
계	49 (100.0)	196 (12.4)	183 (11.5)	168 (10.6)	166 (10.5)	160 (10.1)	140 (8.8)	90 (5.7)	86 (5.4)	58 (3.7)	338 (21.3)	1585 (100.0)

주: 국·공립대학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10개 교육대학을 포함하였음. 교육대학 중 공주교대, 광주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대구교대는 초등교육과임.

출처: 각 대학 교육학과 홈페이지.

〈표 2〉는 전국 교육학과에서 개설한 교육행정학 관련 교과목 현황으로서, 전체 49개 교육학과(초등교육과 포함) 중 24개교(전체의 48.9%)가 교육행정을 전공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의 교육학과 24개 중 13개교(전체의 54.1%)가 교육행정학을 전공필수로 운영하고 있었고, 사립대학의 교육학과 25개 중 11개교(44%)가 교육행정학을 전공필수로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교과목 중 교육행정학 영역을 개설한 비중은 사립대학 교육학과가 높았지만 전공필수로 운영하는 비중은 국·공립대학의 교육학과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교육행정학 관련 교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 교육학과와 경우 교육행정의 명칭으로 개설한 대학교는 15개교, 학교·학급경영은 11개교, 교육정책론 9개교, 장학론 8개교, 교육제도와 법 7개교, 교육경제학 3개교, 교육조직론 2개교, 교육지도성 2개교, 기업교육론 2개교, 교육개혁론과 교육재정 각각 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리고 사립대학 교육학과와 경우 교육행정 25교, 교육정책론 17개교, 학교·학급경영 15개교, 기업교육론 11개교, 교육경제학 10개교, 고등교육론 10개교, 교육조직론 7개교, 교육제도·법 7개교, 교육지도성 7개교, 장학론 4개교, 교육개혁·발전·혁신 3개교, 교육재정학과 교육정치학이 각각 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행정, 학교·학급경영, 교육정책론은 대학설립과 관계없이 교과목으로서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었지만, 사립대학은 기업교육론과 교육경제학을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한 반면에 국·공립대학은 장학론을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과는 달리 고등교육론과 교육정치학 과목은 학부수준에서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학 과목은 대학설립과 관계없이 학부수준에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았다.

〈표 2〉 교육행정학 관련 교과목 현황

구분	교육행정 전필 학교수	교육행정학 교과목 현황(전필, 전선 포함)
국·공립	13개교	교육행정(15), 학교·학급경영(11), 교육정책론(9), 장학론(8), 교육제도와 법(7), 교육경제학(3), 교육조직론(2), 교육지도성(2), 기업교육론(2), 교육개혁론(1), 교육재정(1)
사립	11개교	교육행정(25), 교육정책론(17), 학교·학급경영(15), 기업교육론(11), 교육경제학(10), 고등교육론(10), 교육조직론(7), 교육제도·법(7), 교육지도성(7), 장학론(4), 교육개혁·발전·혁신(3), 교육재정학(2), 교육정치학(2)
계	24개교	

III. 교육행정학 교육의 특징과 한계점

1. 교육행정학 교육의 문제점

우리의 경우 교육행정학 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도 문제이지만, 교육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형식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신현석 외(2014)도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행정학 교육과 연구는 유·초·

중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교사를 위한 교육학과 교육행정학이라는 특징, 교육 중심의 교육행정학이라는 특징, 유·초·중등교육 위주의 교육행정학이라는 특징, 공교육 중심 교육행정학이라는 특징 등으로 교육행정학 교육의 범위가 협소하게 인식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김병찬(2004)도 교직과목인 교육행정의 특징으로 국가수준 교육행정 중심, 이론중심, 백화점식 내용 구성, 강의 대상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강의 내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부수준에서 교육행정학 교육의 특징과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학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교육행정학 영역이 교육심리 영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그 예이다.

둘째, 교육행정학 교육이 이론 중심적이고, 구성 내용도 경직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교육행정학 교육에서 이론적 발달과 배경에 대한 소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교육내용도 학문적 특성상 일상적이지 않은 교육행정 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부 학생들에게 가독성을 저하시켜 경직적이라는 인식이 많다.

셋째, 교육행정학 교육내용이 기능적·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행정학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인 행정의 수단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행정학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단 수단적 가치에 무게 중심이 있는 한 교육행정학의 연구와 교육은 단지 기존 질서나 지배구조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행정학 교육이 기능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본다.

넷째,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행정을 함께 묶어서 보는 접근방식에 대한 거부 의식이 강해 교육행정학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 교육이라는 가치 지향적 활동과 행정이라는 법규·절차 지향적 활동이라는 행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학의 지식구조와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교육행정학 하위 영역간은 물론 다른 분야와의 통섭적 내용도 포함시키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행정학은 교육조직, 교육인사행정, 교육재정 및 경제, 교육시설 등 교육지원을 위한 하드웨어 영역과 동기론, 리더십, 장학론 등 교육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영역, 그리고 교육정치, 교육법 등 교육지원을 위한 실제적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학부 수준에서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Ⅳ. 나가는 말; 교육행정학 교육의 향후 과제

교육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통제 중심의 관료적 교육행정’, ‘관리지향적 교육행정’ 등으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의 수단적 가치만을 중시한다는 인식, 행정경험과 경륜 중심의 교육행정 현장 문화 등의 교육행정에 대한 고정관념이 교육행정학 교육을 경시 혹은 도구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극복하고 교육행정학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계에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지형 개편 등에 관해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교육행정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행정학에서 지향하는 독자적 인재상 정립과 핵심 역량 개발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교육행정의 인재상 정립은 교육의 목적과 방향,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설계하는 지향점이 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논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행정을 통해 양성되는 교육지도자는 미래 인재 양성의 최전방인 학교교육을 이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래 인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육행정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전제인 독자적인 미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작업이 시급히 필요한 과제이다.

둘째, 교육행정학이 지향하는 인재상을 토대로 교육의 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 지식과 규범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행정학의 가치(정태범, 2002, p. 21)를 구현하는 교육목적의 명료화가 필요하고, 동시에 미래 지향의 인재상(예를 들어, 창의·협력·공감·배려를 갖춘 인재, 교육통합형 인재)을 토대로 교육행정 관련 미래 핵심 역량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응용학문이고 다학제적 학문, 종합학문이라는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과 정체성과 연계한 학습내용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제의 경계를 넘어서고, 미래지향의 비판적 사고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내용 개발, 융합적·통합적 교육내용 개발, 그리고 이론과 내용 중심에서 벗어나 주제 중심, 집단문제해결 중심의 통합교육내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행정학의 교육대상을 일반적으로 학문 후속세대, 예비교사, 교장, 교감 등 교육행정이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교육부 및 교육청 담당 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연계성 실현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향후 교육행정학 교육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논의 수준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교재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정한 교육은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임을 고민하며 교육행정학 교육의 지향점을 모색해야 한다.



| 논단 |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대학재정의 딜레마

김수경 | 평택대학교 조교수, 교육학박사

지난 2015년은 5.31 교육개혁 20주년이었다. 지금처럼 대학정책의 수명이 짧고 변화가 무쌍한 상황에서 정책적 기저가 20년 유지되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놀람을 금할 수 없게 한다. 20년간 교육개혁의 방향이 된 5.31 교육개혁에서 대학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은 ① 선택권 확대를 통한 대학선발제도 개선 ②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 ③ 자율과 책임 중심의 대학 운영 ④ 대학교육의 질 개선과 학술연구의 일류화였다. 세부적인 정책추진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20년 전 수립된 교육개혁안과 현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의 논리가 큰 그림 속에서 상당 부분 일관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5.31 교육개혁에서의 ③ 자율과 책임 중심의 대학운영은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수단이었던 정원책정권과 학사운영권을 대학에 일임함으로써 대학 간 교육프로그램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목적에서 주창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학 수가 고등교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학등록금 수입이 대학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었고,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성, 특히 사립대학의 설립의지와 다양성을 감안한 자율 경영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핵심 가치로 논의되어 왔기에, 대학개혁에서의 자율과 책임 중심의 대학운영에 대해서는 대학 뿐 아니라 정부도 이견의 여지는 없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최근 5.31 교육개혁에서 강조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대학 운영’에 대해 고개가 갸웃해진다. 대학의 자율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가치이지만, 대학운영에서의 대학과 정부와의 거리는 대학의 자율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대학과 정부와의 관계는, 대학은 정부의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소소한 정부의 정책변동에 여지없이 침소봉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사상 대학과 정부가 지금처럼 가까운 적이 있었을까,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학재정 측면에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대학 운영’의 고등교육개혁이 추진되어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 대학과 정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2009년 이후 대학과 정부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대학재정에서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성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대학재정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009년과 비교해 2014년 등록금수입의 비중은 -8.2% 감소하는 한편 전입및기부금수입은 5.9%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입및기부금 수입 증가는 같은 기간 교육부 전입금이 평균 524.8%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김수경, 2016).

대학의 핵심 가치인 ‘자율과 책임 중심의 대학 운영’이 교육개혁을 통해서도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은 대학재정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재정지원정책 추진 방식이다. 1990년 중반부터 정부는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합한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대학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의 재정적 위기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련의 재정지원 방식을 반복해왔다. 그 과정에서 ‘경쟁’, ‘수월성’, ‘평가’, ‘순위’ 등의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키워드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었고, 어느 대학도 경쟁의 토네이도에서 배제될 수는 없게 되었다. 대학 입장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실질적 대학의 재원임에 틀림없지만, 그 뿐 아니라 대학의 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효과’의 의미를 갖는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정부 사업 재정을 확보하는 것만이 대학에 곧 닥칠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안으로 확산하며, 대학운영의 자율성은 한담으로 치부하기도 있다.

둘째,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이다. 2009년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회적 문제가 불어온 이후, 7년째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은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상승하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은 주요 수입원인 대학등록금을 7년째 인하 또는 동결을 해오고 있다.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막론하고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국가장학금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국가장학금 수입 전체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어 대학재정 수입에는 사실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대학의 자체노력에 비례한 국가장학금이 대학수입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인해 대학의 지출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

셋째, 2015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1주기 구조개혁평가이다. 5.31 교육개혁에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대학 운영’은 정원책정권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으나, 학령인구가 감소로 시점에서 정부는 다시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을 위해 대학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4년제 대학 204곳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이 2014년에 비해 8,207명을 감축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정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은 강제적으로 입학정원이 감축되게 된다. 또한 2016년 새로이 추진하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을 포함한 대학특성화사업(CKI, CKII),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는 공통적으로 정원조정 및 정원감축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대학은 정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학의 주요 수입인 대학등록금이 7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등록금수입 이외의 수입을 마련해야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대학으로 하여금 자율성을 담보한 채 명확하지 않은 정부가 제시하는 대학모델을 정답으로 추측하며 의존성을 확대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울 뿐 더 이상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지쳐있는 듯 하다. 어찌보면 대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찰과 대학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우선 순위에서 점차 밀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이는 결국 대학의 본질적 기능은 연구, 교육, 봉사에서 ‘평가’를 추가하게 될 것이고, 대학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구, 교육, 봉사보다 평가에 집중하여 투입하는 상황을 도래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대학 교수는 평가를 위해 연구, 교육, 봉사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역할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교수

의 역할은 변화하고, 학생의 요구도 변화하고, 이로 인해 대학운영 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이토록 고등교육정책에서 간과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의 변화인가라는 의문에는 시원한 답이 어렵다.

5.31 교육개혁은 대학교육 발전에 미친 공과 실을 논의하기에 앞서 20년이 넘도록 정부의 장기적인 교육개혁 틀을 제공하였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추진되어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20년 후의 우리나라 대학의 모습을 그려보면 그야말로 ‘블랙홀’이 연상된다. 자율성이 훼손된 대학은 더 이상 기존의 대학의 기능과 대학의 역할에 부합하기 어렵다. 자율성이 훼손된 대학 내에 교수, 교직원, 학생은 ‘성실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발전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학의 자율성보다 정부의 의존성이 높아져 간다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인력’을 뛰어넘는 ‘인재’를 육성하기는 더욱 어려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대학이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년 후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인 교육개혁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대학의 본질인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지하게 공론화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은 대학의 존재, 대학의 기능, 교수의 역할, 인재상 등의 철학적 기초를 재검토하는 것이 긴급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 2016년 학회 주요 소식 •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 http://www.keas.or.kr E-Mail : keas1967@hanmail.net		
학 회	주 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전화번호	02-3290-5325
회 장	성 명	신현석(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화번호	02-3290-2302
			E-mail	hsshin01@korea.ac.kr
사무국장	성 명	주영호(동국대학교-경주 교직부 교수)	전화번호	054-740-4752
			E-mail	youngmonet@dongguk.ac.kr
간 사	성 명	정수현, 장아름, 홍세영, 김혜연(고려대학교), 안지윤(중앙대학교)	전화번호	010-6444-0805
			E-mail	keas1967@hanmail.net

학술지명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 『교육행정학연구』는 201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학연구』에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올해부터 『교육행정학연구』의 발간이 연 4회에서 5회로 증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접수 및 발간일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 호		논문 투고 마감일	발간 예정일
34권	1호	2016년 2월 29일	2016년 4월 30일
	2호	2016년 4월 30일	2016년 6월 30일
	3호	2016년 6월 30일	2016년 8월 31일
	4호	2016년 8월 31일	2016년 10월 31일
	5호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 문의 : 안지윤 편집간사(010-3866-3304, keas1967@nate.com)

국문학술지 증편 및 영문학술지 창간 안내

가. 국문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 연 4회에서 5회로 증편

- 논문 접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처 : 안지윤 편집간사(010-3866-3304, keas1967@nate.com)

권 · 호	논문 투고 마감일	발간 예정일
34권	1호	2016년 2월 29일
	2호	2016년 4월 30일
	3호	2016년 6월 30일
	4호	2016년 8월 31일
	5호	2016년 10월 31일

나. 영문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창간

- 매년 2회(8월 1일, 12월 1일) 발간 예정
- 창간호 : 2016년 12월 1일 발간 예정
-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 75일 전 투고 마감(창간호는 9월 15일 투고 마감)
- 투고 시 심사료 및 게재료 면제, 영문교정비 전액 지원, 게재 시 원고료 20만원 지원
- 심사방식 및 논문작성(편집) 양식은 국문학술지와 동일
- 관련 문의처 : 홍세영 영문편집간사(010-7161-8911, keas1967@naver.com)

2016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주제 공모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는 2016년 10월 29일 충남대학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추계학술대회는 학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발표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 신진학자, 학문후속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여 지금 시대 한국 교육행정 이론과 실제의 주요 주제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연구하고 계시는 주제나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을 개인 혹은 팀으로 발표하고 학회 차원에서 토론, 논의하여 진정한 학문공동체의 진수를 맛보는 장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주제(가제) : 한국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의 조화 : 한국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주요 주제 탐구
2. 일시 : 2016년 10월 29일(토) 9:00~18:40
3. 장소 : 충남대학교

4. 공모 분야

가. 라운드 테이블(학술연구 주제)

- 취지 : 학술연구의 교류, 공유 및 학술성 심화
- 3~5명이 팀을 이루어 발표(학자, 연구자 등), 현장전문가의 공동 참여 가능
- 이론적, 실제적 의의가 있는 자유 주제 선정
- 기존에 연구했던 주제를 발표해도 되고, 새로운 주제 탐구하여 발표도 가능
- 각 발표팀별로 시간은 2시간 배정

나. 라운드 테이블(현장탐구 주제)

- 취지 : 현장 맥락에서 교육행정 주제 탐구 및 현장 대안 모색
- 3~5명이 팀을 이루어 발표(현직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정책담당자 등), 학술연구자의 공동 참여 가능
- 실제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 자유롭게 선정
- 현직교원을 비롯한 현장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발표
- 현직교원이면서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분들의 발표도 적극 권장
- 각 발표팀별로 시간은 2시간 배정

다. 신진연구자 발표 세션

- 취지 :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공유 및 신진연구자 격려
-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의 발표
(이미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분들은 제외)
- 박사학위논문 주제를 가지고 발표
- 발표 후에 학회 차원의 박사학위취득 기념패 증정

라. 학문후속세대 발표 세션

- 취지 :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 강화
-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의 발표의 장
- 개인 발표 및 팀 발표 모두 가능
- 현재 공부(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학회 차원의 검토의 장

5. 신청 기한 및 방법: 2016년 8월 27일(토)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발표 신청서(양식 I과 II) 작성 후 학회 이메일로 제출(keas1967@daum.net)

회원 출판 소식

가. 회원명 : 주삼환

나. 도서명 : 『21세기 한국교육: 진단과 처방』, 학지사

다. 도서 소개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는데도 지나간 세기의 낡은 공장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부딪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에 19세기 20세기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도 이제 교육체제나 학교도 부분적으로 고쳐 쓰기(re-form)에는 너무 늦어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trans-form)는 것이다. 관료적 교육체제도 뒤집고(flip), 교실도 뒤집고, 학습도 뒤집으라고 '거꾸로 학습'을 외쳐대고 있다. 교육으로 일으켜 세운 나라 교육 실패로 망하게 되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적으로도 많고, 또 시간적으로도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도 고치거나 바꿀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더 문제다. 겉으로는 교육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교육을 경시하고 귀중한 아이들과 교육자를 정치권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을 교육논리로 다루지 않고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로 다루는 것 같다. '가진 자'들은 공교육이 망해도 손해 볼 것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공교육을 팽개치고 말로만 걱정하는 척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래도 사교육과 해외 유학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오로지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교육 학교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미래가 달려 있는 교육과 아이들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나라는 혹독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기가 바뀌고 밀레니엄이 바뀌기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하여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짚어 긴급 진단해 보고 나름대로 혁신 처방 방향을 제시한다.

그동안 필자는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하여 좀 쓴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쓴 소리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더 이상 교육에 대하여 말할 기력조차 없다. 이 책은 교육정책 행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과 학부모, 교육자도 읽고 생각을 나누길 기대한다. 학문 분야로는 교육개혁과 혁신, 리더십과도 관련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

도 서	목 차
	01 실패하는 한국교육: 진단
	02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과 교육의 발전
	03 산업사회를 넘어선 지식정보·문화창조사회 교육
	04 산업사회에서의 교육개혁 노력
	05 21세기와 교육
	06 21세기에 요구되는 기능
	07 21세기의 교육 지원체제
	08 21세기의 한국교육을 위한 제안: 처방
	09 교육 생각: 관련 교육칼럼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가. 회원가입 :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

나. 회비납부 : 학생회원(석사과정) 3만원, 정회원(박사과정 이상) 5만원, 기관회원 10만원

- 계좌번호 : 우체국 613844-01-005503 (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신규회원인 경우 가입비 1만원 별도로 납부
- 관련 문의처 : 장아름 총무보조간사(010-4543-5624, keas1967@daum.net)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2016년 7월 20일 기준)

2016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7월 20일)

강선영, 박주철, 구성우, 권동택, 권상순, 권은경, 권혁진, 김경숙, 김영애, 김민경, 김본영, 김성중, 김솔, 김정민, 김정원, 김창용, 김현철, 김희란, 김희성, 남궁지영, 도승이, 모화숙, 문영진, 민수빈, 민진홍, 박유미, 박희원, 서재영, 서화정, 송경하, 신범철, 신영수, 신혜숙, 심정연, 안수진, 오예진, 오유진, 오현석, 우해난, 윤유진, 윤초희, 이경오, 이기호, 이용주, 이이찬, 이종욱, 이주희, 임국화, 임예진, 임재욱, 장귀덕, 장명희, 장이선, 정선희, 정예화, 조영찬, 조진한, 주영달, 진동섭, 최영휴, 최윤희, 한상윤, 홍정순, 황석, 황은희, 황재운

2016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7월 20일)

가신현, 강은숙, 강재혁, 고득환, 고병면, 고전, 광경희, 권성찬, 권순형, 권초아, 김갑성, 김경민, 김관래, 김규태, 김근진, 김도기, 김명수, 김민조, 김민희, 김병찬, 김세정, 김양분, 김영식, 김왕준, 김용남, 김용일, 김용, 김용갑, 김용주, 김윤진, 김은정, 김인희, 김장래, 김정현, 김지선, 김지현, 김지혜, 김한나, 김현숙, 김현진, 김혜진, 김효진, 나민주, 나임, 남미자, 남해진, 라은중, 러군, 류명혜, 류민영, 류윤석, 문영빛, 문찬주, 민경준, 민병제, 박경호, 박균열, 박대권, 박상완, 박선주, 박선형, 박세훈, 박수미, 박수연, 박수정, 박영숙, 박영희, 박예진, 박종필, 박주미, 박주형, 박해경, 반상진, 배상훈, 배지혜, 백규호, 백정하, 백종면, 변수연, 석혜정, 성삼제, 손경애, 송경오, 신민정, 신봉섭, 신상명, 신유식, 신재성, 신재홍, 신철균, 신하균, 신현석, 신혜진, 심정연, 안선희, 안성주, 안영선, 안영은, 엄문영, 엄준용, 엄만호, 오경희, 오범호, 오예진, 우명숙, 위은주, 유경훈, 유길한, 유재환, 유지은, 유현숙, 윤관수, 윤기현, 윤소희, 윤정, 윤정인, 윤지희, 윤희주, 이경옥, 이경호, 이규영, 이낙중, 이동화, 이미심, 이병식, 이상문, 이상철, 이선아, 이승연, 이승호, 이영내, 이영철, 이윤식, 이은진, 이은화, 이인수, 이인희, 이일용, 이재덕, 이재봉, 이지영, 이치호, 이창열, 이필남, 이현서, 이혜미, 이호준, 이효미, 이희숙, 임성범, 임소현, 임연기, 임우섭, 임채안, 장훈, 전경애, 전병식, 전승희, 전재은, 정기오, 정동욱, 정모진, 정성수, 정수현, 정원숙, 정재균, 정재안, 정제영, 정주영, 정현주, 조미애, 조영재, 조영하, 주철안, 주현준, 차성현, 채재은, 채정관, 최경준, 최광원, 최상영, 최선향, 최윤정, 최정윤, 최준열, 하정윤, 한대동, 한유경, 허경일, 홍성철, 홍지인, 홍창남, 황윤한

2016년 이사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7월 20일)

김도기, 김병주, 김병찬, 김이경, 김희규, 박선형, 박영숙, 변기용, 배상훈, 신재홍, 신철균, 이정기, 전제상, 조남두, 조석훈, 조영하, 최창섭

2016년 기관회원 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7월 20일)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거제대학교 도서관,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 교원대학교 도서관, 남서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한국경기도교육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합동군사대학교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제34권 (2016)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4월 30일	6월 30일
	3호	6월 30일	8월 31일
	4호	8월 31일	10월 31일
	5호	10월 31일	12월 31일

■ 논문 심사 적부 판정

논문 본 심사에 앞서 ‘교육행정학’ 논문에 대한 적부심사를 편집위원회에서 거칠 예정(‘적’으로 판정되면 논문 심사 진행, ‘부’로 판정되면 심사비 환불 및 심사 진행 불가)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 ② 이를 기준으로 2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페이지 초과 시 1페이지 당 2만원 추가
-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100,000원(외국어 논문 심사료 150,000원)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게재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200,000원 이상
- ③ 납부방법 :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입금계좌 : 우체국 613844-01-005503(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기타 : 접수 마감 당일 자정까지 접수하며 기한을 넘긴 논문은 다음 호 심사료 이관됨

- 관련 문의처 : 안지윤 편집간사(010-3866-3304, keas1967@nate.com)

※ 연회비를 납부하시고도 위 명단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연회비 납입 시 반드시 ‘성명’과 ‘연회비’로 기재하여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회비 납부계좌 : 우체국 613844-01-005503(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10월에 있을 부회장 선거에는 2015년 회비 및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선거권을 행사하실 회원님께서 회비납부현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뉴스레터 온라인 전환 안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금호(제122호)부터 뉴스레터는 온라인으로만 발간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후에 학회 메일(keas1967@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 메일(keas1967@hanmail.net) 또는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아울러 회비가 2년 이상 연체된 회원들은 학회 홈페이지 내 자료 접근이 제한됩니다. 자격 회복을 원하시는 경우 학회 회칙 제9조 내지 제10조를 참조하시고 사무국(010-6444-0805)으로 연락바랍니다.
- 학회 회비가 연체된 경우는 학회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한(학회지 배송, 학회지 투고, 소식지 동향 기재, 부회장 투표권 등)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체된 회비는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제정보확인'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연체된 내역은 개인 메일이나 유선전화로 개별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회비, 학회 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안내

- 입회비 : 10,000원
- 연회비 :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회비납부 계좌 : 우체국 613844-01-005503 (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16년 제44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 E-mail : keas1967@hanmail.net
- 전화번호 : 010-6444-0805
- 회 장 : 신현석 (고려대학교)
- 부회장 : 주철안 (부산대학교)
- 사무국 : 사무국장 주영호 (동국대학교)

총무간사 정수현 (010-6444-0805) keas1967@daum.net

편집간사 안지윤 (010-3866-3304) keas1967@nate.com

제44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신현석(고려대학교)
- 부 회 장 : 주철안(부산대학교)
- 감 사 : 이석열(남서울대학교), 김민희(대구대학교)

■ 이사회

• 당연직 위원 34명

김영식, 신극범,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 선임직 위원 61명

강경석(인하대), 고 전(제주대), 김 용(청주교대), 김갑성(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남순(조선대), 김도기(교원대), 김동석(한남대), 김병주(영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이경(중앙대), 김인희(교원대), 김재웅(서강대), 김현진(국민대), 김혜숙(연세대), 김홍주(KEDI),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남기(광주교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영숙(KEDI), 박종필(전주교대), 박주호(한양대), 반상진(전북대), 배상훈(성균관대), 변기용(고려대), 송경오(조선대), 송기창(숙명여대), 신상명(경북대), 신재흡(한성대), 신정철(서울대), 신철균(KEDI), 안선희(중부대), 양성관(건국대), 양정호(성균관대), 오세희(인제대), 오영재(고려대), 유현숙(KEDI), 이명주(공주교대), 이병환(순천대), 이수정(단국대), 이정기(백석대), 이차영(한서대), 조홍순(중부대), 장덕호(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조남근(세명대), 조남두(신구대), 조석훈(가천대), 조영하(경희대), 차성현(전남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최창섭(강릉대), 한유경(이화여대), 홍창남(부산대)

■ 분과위원회 구성

• 기획·홍보위원회

- 위원장 : 고전(제주대) - 부위원장 : 김갑성(교원대)
- 위 원 : 김성기(협성대), 김순남(KEDI), 박인심(서울여대), 백정하(대교협),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차영(한서대), 차성현(전남대), 황준성(KEDI)

• 학술위원회

- 위원장 : 김병찬(경희대) - 부위원장 : 송경오(조선대)
- 위 원 : 김가신현(고려대), 김민조(청주교대), 김왕준(경인교대), 김현진(국민대), 박대권(성균관대), 박수정(충남대), 신철균(KEDI), 유경훈(광주교육정책연구소), 유길한(진주교대), 이길재(충북대), 정동욱(서울대)

• 편집위원회

- 위원장 : 김이경(중앙대) - 부위원장 : 이석열(남서울대)
- 위 원 : 고장완(성균관대), 박근열(KEDI), 반상진(전북대), 우명숙(한국교원대), 이재덕(KEDI), 이혜미(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제상(공주교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제영(이화여대), 채재은(가천대)

• 영문편집위원회

- 위원장 : 이수정(단국대) - 부위원장 : 김용련(한국외대)
- 위 원 : 김근진(서울대), 박혜영(고려대), 변수연(부산외대), 서재영(충북대), 엄문영(경인교대),
오예진(영남대), 이길재(충북대), 전재은(세명대), 주현준(대구교대), 허주(KEDI)

• 국제학술위원회

- 위원장 : 박선형(동국대) - 부위원장 : 박소영(숙명여대)
- 위 원 : 박삼철(단국대), 전수빈(동국대), 정바울(KEDI), 조영하(경희대), 주동범(부경대), 황윤한(광주교대)

• 학회발전위원회

- 위원장 : 조석훈(가천대) - 부위원장 : 김민희(대구대)
- 위 원 : 김근진(서울대), 김훈호(KEDI), 박주형(경인교대), 박창언(부산대), 박호근(한국체대),
엄문영(경인교대), 이태상(상지대), 장덕호(상명대)

• 대외협력위원회

- 위원장 : 김병주(영남대) - 부위원장 : 변기용(고려대)
- 위 원 : 강석(광주교육정책연구소), 박엘리사(송실대), 서지영(대교협), 서화정(영남대), 윤기현(KICE), 이쌍철(KEDI),
채정관(감사원), 최원석(충북대), 한상윤(서울시학생교육원)

• 조직·규정위원회

- 위원장 : 김희규(신라대) - 부위원장 : 유평수(전주대)
- 위 원 : 김경윤(중앙대), 김한나(KEDI), 류준근(서울과학기술대), 이병환(순천대), 이원근(평생교육진흥원),
이준희(영동대), 정금현(교육부)

• 재정·기금위원회

- 위원장 : 나민주(충북대) - 부위원장 : 박수정(충남대)
- 위 원 : 김지하(KEDI), 남수경(강원대), 송선영(대교협), 신정철(서울대), 오범호(경남대), 이병식(연세대),
이미라(영남대), 정재균(전북교육정책연구소)

• 학술편찬위원회

- 위원장 : 박상완(부산교대) - 부위원장 : 홍창남(부산대)
- 위 원 : 김용(청주교대), 김홍섭(전 교육부·독산고), 양성관(건국대), 염민호(전남대), 유길한(진주교대),
이기성(서울사대부고), 이명숙(서울중앙초), 장덕호(상명대), 전상훈(고려대)

• 윤리위원회

- 위원장 : 신재흡(한성대) - 부위원장 : 신봉섭(나사렛대)
- 위 원 : 구희완(그리스도신학대), 권동택(교원대), 김기선(인천광성중학교), 배상훈(성균관대),
엄준용(중부대), 이두영(인천대), 이정기(백석대)

• 정책연구위원회

- 위원장 : 오세희(인제대) - 부위원장 : 이인희(제주대)
- 위 원 : 권혁진(한림공고), 김무영(경운대), 김정희(대교협), 박상욱(동의대), 이일권(서울휘봉초), 이필남(홍익대),
장환영(동국대), 하정윤(순천제일대)

• **포럼운영위원회**

- 위원장 : 안선희(중부대) - 부위원장 : 손희권(명지대)
- 위 원 : 김수경(평택대), 김영식(KRIVET), 김지영(극동대), 김현진(국민대), 노명순(여의도연구원), 이경호(고려대),
이준희(영동대), 주휘정(KRIVET), 하봉운(경기대)

• **부회장선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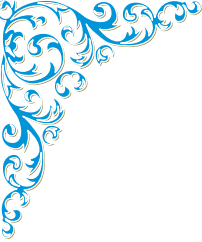
- 위원장 : 신상명(경북대) - 부위원장 : 김도기(한국교원대)
- 위 원 : 김갑성(한국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왕준(경인교대), 박종필(전주교대), 신철균(KEDI), 양성관(건국대),
전제상(공주교대), 차성현(전남대)

• **소석논문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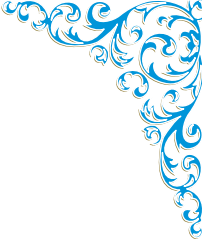
- 위원장 : 남정걸(단국대) - 부위원장 : 강영삼(국민대)
- 위 원 : 강무섭(강남대), 강인수(수원대), 노종희(한양대), 신중식(국민대), 신현석(고려대), 이종재(서울대),
주삼환(충남대)

■ **사무국**

- **사무국장** : 주영효(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총무간사** : 정수현(고려대학교), 장아름(고려대학교)
- **편집간사** : 안지윤(중앙대학교)
- **영문학술지 편집간사** : 홍세영(고려대학교)
- **포럼간사** : 김혜연(고려대학교)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